

## "한일 국교정상화 50년 -위기인가, 기회인가?"

정구종 鄭求宗

동서대 석좌교수 · 일본연구센터 고문



2015년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지 50년째가 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 해방도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따른 필연의 결말이었고, 수교 역시 과거의 침략자 일본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의 순리에 따른 결과였다.

해방 70년을 맞아 주요 언론들은 8월 15일자 신문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살리고 새로운 각오로 나라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의 사설을 실었다. 『광복 70년, 나라 세울 때의 절박함으로 위기극복을』(동아일보), 『광복 70년의 성취, '원 코리아'로 가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조선일보), 『광복·분단 70년...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자』(중앙일보), 『광복 70돌, 평화복지국가와 통일의 길로』(한겨레) 등등.

이처럼 주요언론들은 일제식민지 지배의 쓰라린 역사를 딛고 통일과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목표를 세워 앞으로 나아가자는 미래지향의 각오와 단합을 호소했다.

한편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을 되돌아 보는 여론들은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이라는 지적과 함께 착잡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것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과거사 청산에 인색한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한일 간에 역사인식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교 반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의미를 재조명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지향해 나아가자는 역사적 선순환의 선택을 촉구하는 지적 또

한 적지 않았다.

반세기전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1965년 6월 22일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정이 도쿄에서 한일양국 외무장관에 의해 체결되었다. 한국에서는 “한일 굴욕회담 반대”를 외치면서 “대일 저자세 외교”를 중지하라는 대학생들의 치열한 데모가 1년 이상 계속되었다. 정부는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면서 한일회담의 성사를 향해 강행군 하는 등 일본과의 수교를 둘러싼 국내적인 갈등이 계속되던 끝에 한일국교정상화가 실현된 것이다.

### 한일국교정상화는 불구대천의 반일감정을 극복하고 국리민복과 우리의 내일을 위한 현명한 방향

협정체결 다음날인 6월 23일 오후 8시, 박정희 대통령은 라디오와 TV를 통해 한일국교 정상화에 즈음한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지난 수십 년 간, 아니 수백 년 간 우리는 일본과 깊은 원한 속에 살아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독립을 말살하였고 우리 부모 형제를 살상했고 우리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무친 감정은 어느 모로 보나 불구대천不俱戴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김종필 증언록』 2016년)

박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한일관계의 「한 맺힌」 역사를 되새겨 국민적 반일감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불구대천의」 일본과도 손잡아야 할 「우리의 내일」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호소했다.

박대통령은 이어 “나는 국민 일부 중에서 한일교섭의 결과가 굴욕적이지 저자세니 또는 군사적·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는 등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매국적이라

고까지 극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일본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먹힌다”는 피해의식과 열등의식부터 깨끗이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한일국교정상화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관건은 우리의 주체의식에 달렸다”고 역설했다.

필자는 당시 대학생으로서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에 참가했다. 반대데모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한일수교 자체를 반대했다기 보다는 박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를 규탄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본적도 없는 역사의 단절세대에 있어 일본은 ‘과거의 침략자’라는 경계와 피해의식이 앞섰던 것이다.

박대통령이 그토록 한일수교를 강행하려 했던 배경에 대해 한일회담 막후에서 이케다 일본수상과의 비밀예비 회담 및 「김·오히라 메모」로 회담의 성사를 측면 지원했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최근 간행된 증언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대일청구권자금(8억 달러)을 받아 종합제철소를 만들고 싶어 했다. 경제개발에 집중해 기업과 소득, 일자리를 늘리고 북한과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에 한 톨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김종필 증언록」, 2016)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학생시위를 1면 톱기사로 보도하고 있는 당시 일간지.

#### 대일경제 예측과 군사적 침략을 우려한 반대논리는 과거의 침략자라는 피해의식에서 나온 기우杞憂

한일수교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반대세력들이 우려했던 「경제적 침략」에 대해 되돌아보자. 회담의 결과로 확보되었던 대일청구권 보상 자금이 종자돈이 되어 60년대의 한국 경제 건설과 70년대의 성장이 가능하였음을 부정하는 지적은 거의 없다.

당시 한일회담 막후 협상과정에서 작성된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는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의 지시를 받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방미 귀국길인 1962년 11월 12일 일본에 들러 오히라마사요시 일본외상의 사무실에서 세시간에 걸친 양자회담과 담판의 결과 합의된 대일청구권보상의 내용을 메모로 남긴 기록이다. 메모의 내용은 “① 무상 3억 달러 ② 유상(대외협력기금) 2억 달러 ③ 수출입 은행에서 1억 달러 + 알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김종필 증언록」)

「…김-오히라 메모의 6억달러+알파는 1965년 양국 외무부 간 최종 타결 과정에서 8억달러로 조정됐다. 대일 청구권 자금은 포항제철(1억 3,000만 달러)과 경부고속도로,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에 요긴하게 쓰였다. 특히 종합제철 소인 포철은 입지 선정과 제철기술 도입 등에 내가 나섰다. 동해안을 돌아다니며 항구 건설이 용이한 포항을 제철소 부지로 선택했고, 신일본제철의 이나야마 요시히로 회장이 공장설립과 기술 도입을 도와주도록 했다. 포철은 한국이 세계 5위의 자동차, 세계 2위의 조선 생산국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철강 자체 공급원이 됐다. …」(『김종필 증언록』)

한국이 오늘날 세계 8위의 무역국가로 우뚝 선 것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따른 「무역입국」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구조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하여 가공·조립해서 수출하는 한국의 산업구조상 대일 무역적자가 계속돼 온 것은 사실이나 2011년부터는 부품, 소재 수입 다변화에 따른 대일 의존도가 감소하여 적자폭이 축소되는 경향에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규모와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한일회담 반대 당시 지적되었던 ‘대일경제 예속’이나 경제 침략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하겠다.

또한 회담반대 이유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군사적 침략 우려’도 현 시점에서 볼 때 지나친 경계였다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일제 36년 동안 우리민족이 겪었던 식민지 지배는

군사력을 앞세운 군국일본의 해외팽창전략에 따른 희생이었다. 따라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다시 강해져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한 경계는 항상 떨칠 수 없다. 일본은 패망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총사령부(GHQ)에 의해 무장해제 되었고 군수공장들도 해체되었다. 또한 헌법에도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갖지 않는 나라를 지향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개념을 명문화 하였다.

한편 동서냉전기의 격동하는 국제정세는 일본을 언제까지나 비무장·비전투상태의 국가로 남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1950년 북한을 앞세운 공산진영의 남침에 의한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했고 군수공장들도 되살려 놓았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현재 일본은 서방세계 3위의 방위예산을 쓰면서 해군력을 중심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북한의 핵실험·미사일발사 등으로 안보 면에서 한일의 공동대응은 불가피

일본은 아베 신조 수상 취임이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2015년)하는 등 헌법상 금지해 왔던 자위대의 해외 진출 및 전투행위도 가능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들은 전후 70년의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군사력강화를 새삼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군사대국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지적들이 강하다. 군사전문가와 국제정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군사 대국」이 되려면 ①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②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갖고 있으며 ③ 장거리 폭격기를 보유하고 ④ 공격용 전투기를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을 가져야 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은 아



시노모세키에서 매년 축제처럼 벌어지는 조선통신사 거리 행렬 장면(2015년)



직 이 가운데 한 가지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 (정구중 『일본의 국가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2016)

미국이 일본을 미일안보동맹으로 묶고 있는 것은 공산권 등 대항세력에 대한 공동대처가 주목적이지만 일본이 독자적으로 군사대국화 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한 장치로서도 필요하다는 전략 속에서 미일동맹이 일본을 견제하고 있다고 미국의 안보·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일본이 근미래近未來에 군사대국화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일본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면에서 군사대국화의 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을 갖고 있음을 한국 및 주변국가들은 인식하고 경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구중, 위와 같음)

### 과거의 트라우마를 벗어던지고 개방적인

####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진취적 새로운 관계구축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북한의 잇단 핵실험·미사일발사 등으로 안보 면에서 한일의 공동대응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해상루트는 한국과 일본의 원유 수송과 수출입물자 유통에 있어 이익이 공통되는 해역이다. 중국은 핵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한 정세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안보상의 협력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한·미·일 정보협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와 경계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감시해 나아가는 안보네트워크를 통해 확립해 가는 한편으로 일본을 서방세계의 확실한 안보협력자로 참여시키는 슬기 또한 필요하다.

한일수교는 안보와 경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양국의 협력이 불가피했던 시대상황의 산물이었다. 한편으로 일본

의 과거사 반성을 확실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0년전의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양측이 교환한 협약 내용에는 일본의 과거 한반도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표현이 한군데도 없다.

한국이 당시 경제건설과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 등에 쫓긴 나머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 행위에 대한 사죄를 받아내는데 무관심했고 일제침략 당시의 개인피해 보상 등에 대해 소홀히 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의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침략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 문제에 있어 구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냉전 이후 한일간 과거사 반성과 사죄 및 보상문제의 최우선과제로 제기되어 왔고 한일관계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다행히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이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간다는데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다. 일본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외상의 발표문을 통하여 총리 및 일본정부의 사죄를 문서로 확실히 하였다.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②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무장관회담 공동기자발표)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한국정부는 2016년 7월 위안부 피해

자의 명예회복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였고 일본정부는 재단에 「일본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출연하여 현재 위안부 피해자 보상 및 지원사업이 진행중이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 요구는 전후 7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피해각국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종전 70년이 되는 2015년 8월 14일 「내각 총리 대신 담화(아베 담화)」를 발표하였다.

전후 70년의 아베 담화는 그 표현이 남의 일 다루듯 하는 제3자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고 내용도 반성과 사죄에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정부 및 아베 수상은 전후 70년을 맞아 제2차대전에서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에 대해 이 담화로 반성하고 넘어가자는 뜻이 강하게 나타나 있으며 더 이상 과거의 침략행위 등에 대해 발목이 잡히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일본의 이 같은 '탈蔄 전후' 움직임은 한국은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이라는 국가적 행보를 경계하는 한편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일 간에는 침략과 지배라는 역사적 부负的 유산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려 하고 오히려 미화하려 하는 일본 내 일부의 극우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려 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상존한다. 일본사회 일부의 혐한론嫌韓論과 반한 감정들이 한일관계의 밝은 장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급격히 변해가고 있는 최근의 국제정세를 냉철히 관찰할 때 국제관계는 한일양국관계에서만 보던 시대는 지났다. 부상하는 중국의 존재감과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



2016년 11월23일 동북아 군사안보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한일군사정보협정이 맺어졌다.

고 있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과 미국대통령 선거에서의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면서 서방 주요국들의 신고립주의와 보호주의의 우선정책에 대해 한·일 등 중견국가들에게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의 한일관계는 과거의 피해의식과 열등의식 등의 트라우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개방적인 '열린 세계로 나아간다는 진취적인 발상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교정상화 50년은 한국에 있어서나 일본으로서나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을 향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미래지향의 새로운 관계구축에 함께 나아가야 할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盧 走

#### 필자 약력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고문  
전 동아닷컴 대표이사 사장  
전 동아일보 이사, 편집국장, 동경지사장